

# 제주에서 사회학하기\*

## -사회학의 존재이유 되찾기

서영표\*\*

- I. 머리말
- II. 제주의 사회학
- III. 사회학의 출현과 성장
- IV. 사회학의 한계와 새로운 도전
- V. 제주에서 사회학 하기-우리 안의 보편성 찾기

### 국문요약

이 글은 사회학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최근 들어 부각되고 있는 사회학의 위기는 이식된 학문으로 토착화 되지 못했던 한국의 학문풍토가 처음부터 안고 있었던 문제가 세계적 수준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위기와 맞물려 증폭된 것이다. 하지만 다중적 위기가 사회학의 위기로 표출되는 것은 역설적이다. 사회학은 급격한 사회변동의 산물이었으며 위기에 대한 진단과 처방, 그리고 개입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학문적 위기를 현실로부터 거리를 둔 아카데미즘으로 돌파해야 한다는 주장은 위기의 원인을 오인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이 오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서구의 사회학사가 현실과의 부단 없는 대화와 긴장의 산물이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

---

\* 이 논문은 2014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3A2044381).

\*\*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고 대화와 긴장의 역사가 어떻게 새로운 이론적 발전을 가져왔는지 포스트모던적 사회학까지 그 궤적을 추적한다. 이론적 실천의 역사를 통해 협소하게 정의된 실증주의적 과학관을 비판할 수 있을 것이며 근대적인 목적합리성에 대해 반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회학사가 담고 있는 비판과 반성은 중심에서 벗어난 주변의 관점이 오히려 사회학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유리한 관점일 수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비판과 반성이라는 이론적 자원이 제주라는 ‘경계’적 장소를 만나서 (이론적) 실천으로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학의 존재이유라는 보편적 근거를 제주라는 구체적 공간의 특수성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주제어: 제주, 사회학, 사회학의 위기, 비판, 이론적 실천.

## I. 머리말

위기의 시대다. 세계 경제는 불황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서구사회에 서조차 한 때 해결했다고 믿었던 빈곤이 사회적 문제로 되돌아왔다. 올 초 칸영화제의 그랑프리를 수상했던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 I Daniel Blake>는 경제위기가 어떻게 관료제라는 ‘괴물’을 통해 인간존엄을 파괴하는지 보여주었다. 경제위기는 인간존엄을 무시하면서 사회의 위기를 만들어 낸다. 자본주의 경제체계가 이윤의 논리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되었던 ‘정치적 개입’은 지난 40년 동안 신자유주의의 기치 아래 무력화되었다. 모든 종류의 정치적 개입은 시장의 효율성을 침해한다는 이데올로기적 공격이 수행되었다. 이것은 곧 정치의 위기를 초래했다. 최소한의 대표성을 가졌던 대의 정치는 돈의 힘 앞에 무력하게 무너져 내렸고, 사람들은 점점 정치를 불신하고 정치적 무관심으로 치닫게 된다.

<나, 다니엘 블레이크>를 감독한 켄 로치(Ken Loach)는 영화 속에서 지금 우리가 처한 총체적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좌절과 절망을 극복할 ‘희망’이라고 말한다. 잔인한 경제 논리가 강요한 경쟁과 소비주의에 의해 원자로 파편화 된 사람들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 있는 연대의

감정에 호소하고 있다. 무지막지한 경제적 논리가 사람들이 삶을 건디어 온 유대를 망가뜨리고, 정치적 목소리를 돈의 힘으로 차단하고, 경쟁의 논리를 사람들의 몸과 마음에 새겨 넣음으로써 쌓이는 불만은 오인된 적을 향해 표출되기도 한다. 나와 다른 언어와 종교를 가진 사람, 나와 피부색이 다른 사람, 나보다 더 약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향한 원한의 시선 말이다.<sup>1)</sup>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희망의 근거를 찾아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희망을 찾는 작업이 쉽지만은 않다. 절망적 현실의 무게가 너무 커서 ‘대안은 없다’는 생각을 넘어서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희망의 근거가 되는 변화의 가능성은 경험적 실재를 파고드는 날카로운 통찰력을 요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 ‘관행대로’의 상태를 넘어 서기 위해서는 ‘다름’을 상상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신자유주의는 학문을 상품화함으로써 통찰력을 무력화시켰고 일상을 소비주의 문화로 재편함으로써 상상의 자유를 박탈했다.<sup>2)</sup>

바로 여기, 상상이 가로막힌 지점이 사회학이 개입해야 하는 곳이다. 사회학은 처음부터 위기의 산물이었고, 동시에 위기를 해결하려는 이론적 실천이었기 때문이다. 사회학은 한편으로 추상적인 이론을 추구했지만 언제나 현실에 대한 개입이었다. 구체적인 시공간에서 유리된 사회학은 그 자체가 모순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위기의 시대에 ‘사회학의 위기’가 대두되는 것은 역설적이다. 사회학이 위기를 해명하고 해결하려는 이론적 고투라면 위기는 사회학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여야 하지 않는가?<sup>3)</sup>

이러한 역설이 발생하는 것은 신자유주의가 강요한 자본의 논리가 대학에까지 침투해 들어오고 그 결과 사회학이 스스로의 존재이유를 망각

1) 서영표, 「난민을 관리하는 정치 또는 난민에 의한 ‘난민정치’」, 『문화과학』 88호, 2016; 「포퓰리즘의 두 가지 해석 : 대중영합주의와 민중 민주주의」, 『민족문화연구』 63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4를 보라.

2) 서영표, 「당연한 것을 낯설게 하는 실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 『진보평론』 60, 2014.

3)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은 “실패는 일시적이지만 희망은 지속적”이라고 주장한다. “가능성은 파괴될 수 없으며 가능성의 실현을 방해하는 역경은 단단하지 않다”고도 이야기 한다. 지그문트 바우만, 『사회학의 쓸모』, 서해문집, 2015.

하고 있기 때문이다.<sup>4)</sup> 현실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럼으로써 현실이 담고 있는 모순을 비판적으로 해명하기 보다는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를 생산하는 학문으로 전락할 때 사회학은 존재 이유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위기(총체적, 다중적 위기)는 사회학의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여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사회학의 존재이유가 현실에 대한 비판적 개입이라면, 그래서 추상적이고 당위적인 이론에 그쳐서는 안 된다면 사회학은 구체적인 장소, 구체적인 시공간과의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사회학의 존재 이유를 되찾는 이론적 실천의 하나로 ‘제주’라는 구체적 장소에서의 ‘사회학 하기’를 제안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단순히 제주 사회를 설명하고 독특함을 찾는 ‘제주학’의 부분으로서의 사회학하기가 아니라 총체적 위기를 돌파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찾기인 ‘제주에서’ 사회학하기가 요청되는 것이다. 특수성에 스스로를 한정하고 지역학의 독특함을 앞세우는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학문하기가 아니라 특수성의 추구 속에서 보편성을 찾아내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한 것이다.

## II. 제주의 사회학

### 1. 한국 사회학의 과거와 현재

한국 사회학은 항상 위기였다. 최근 들어 그 위기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은 한편으로 전 세계적인 지적 위기가 겹쳐지고 있기 때문일 뿐이다. 그리고 전 지구적 지적 위기를 강화하고 있는 대학의 기업화와 지식의 상품화가 초래한 제도적 위기 때문에 더 크게 느껴지고 있다.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을 제기하는 토대 학문으로서의 사회학은 ‘실용’을

4) 서영표, 「비판정신의 실종과 민주화운동 세대의 이율배반」, 『대학: 담론과 쟁점』, 한국대학학회, 2016을 보라. 대학의 위기는 한국만 겪고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다 일반적인 논의는 Michael Bailey and Des Freedman eds., *The Assault on Universities: A Manifesto for Resistance*, Pluto Press, 2011를 참고하라.

최우선적인 가치로 간주하는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 사회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줄어들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전문적 연구자의 길을 가고자하는 사람들도 급감하고 있다.<sup>5)</sup>

사실 한국에 사회학이라는 학문 분과가 도입되는 출발부터 문제가 있었다. 경성제국대학의 좌파적 학풍은 해방 후 미군정이 계획한 ‘국립 서울대학교 설립안’에 의해 서울대학교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짝이 잘렸다. 서울대학교는 미국의 학문을 받아들여 남북의 분단과 이념 대립 속에 그 좌파적 학풍의 반대쪽만을 용인하고 제도화했다. 정치적 중립을 ‘학문적 엄정함’이라고 생각하는 실증주의적 학풍이 인문사회과학의 주류로 승인되는 과정이었던 것이다.<sup>6)</sup> 한국 최초로 만들어진 서울대 사회학과는 이런 조건 곳에서 일본유학과-실증주의를 신봉하고 있었던 학자들에게 의해 기초가 놓여졌다. 창립자인 이상백은 이런 학풍을 주도한 대표적인 사회학자였다.<sup>7)</sup> ‘학문적 중립성’과 ‘사회조사’를 중심에 둔 실증주의적 학풍으로 2세대 사회학자들을 길러냈고, 그러한 학문적 태도의 전범을 미국에서 찾도록 이끌었다.<sup>8)</sup> 당시 세계 사회학계를 지배하는 이론적 입장이었던 구조기능주의가 한국 사회학의 주류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자유주의를 신봉하고 주어진 사회를 완결된 유기체적 구조로 가정하며 다양한 제도와 역할들이 유지되도록 하는 체계적 수준의 요건 충족에 관심이 있었던 탈코트 파슨스(Talcott Parsons)의 구조기능주의는 미국의 헤게모니체제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적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었다. 지배적 규범의 내재화와 ‘정상적’ 시민으로의 사회화가 한편에 있고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비정상적 이탈, 또는 병리적 현상이 있었다.<sup>9)</sup>

구조기능주의와 쌍을 이루는 것이 근대화이론이었다. 새롭게 독립한

5) 정태석, 「사회학의 위기 논쟁과 비판사회학의 대응」, 『경제와 사회』 88, 비판사회학회, 2010, 98-99쪽.

6) 정수복, 「이상백과 한국사회학의 성립」, 『한국사회학』 50(2), 한국사회학회, 2016, 17-18, 25쪽.

7) 위의 글, 18-19쪽.

8) 위의 글, 20쪽.

9) I. 크레이브, 『현대사회이론의 조명-파슨스에서 하버마스까지』, 문맥사, 1991, 3장을 보라.

제3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서구, 특히 미국이 설정한 경로를 따라 합리적으로 근대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 발전을 성취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나중에 세계 경제는 구조적으로 불균등하게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을 제기한 종속이론과 세계체제론의 표적이 되는 개발독재의 이론적 토대가 바로 그 입장이었다.<sup>10)</sup>

이제 막 유아기를 통과하고 있었던 한국 사회학이 구조기능주의라는 거대이론과 그것에서 연원하는 근대화이론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다. 구조기능주의와 근대화이론을 공격하는 비판적 입장이 학계에 보장되었다면 그나마 독자적인 학문적 공간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러한 비판적 학풍은 분단의 조건 속에서 이미 사라져 버렸다. 한국 사회학의 몫으로 남는 것은 구조기능주의에 근거해서 근대화의 ‘대상’인 한국 현실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는 것이었을 뿐이다. 사회조사가 사회학이 주된 임무가 된 것이다. 근대의 이름으로 합리화해야 하는 대상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는 사회조사를 위한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사회학자의 학문적 역량에서 핵심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 사회학의 토대를 놓았던 1세대 학자들이 가졌던 학문적 중립성과 실증주의 학풍에 들어맞는 것이었다.

김경동으로 대표되는 2세대 사회학자들의 학문적 수준이 사회조사작업에 그쳤다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사회학의 토착화를 목표로 내세우고 한국의 사상적 전통에 관심을 두고 한국적 사회학을 정립하려는 이론적 노력을 경주했다.<sup>11)</sup> 하지만 한국의 사상적 전통과 사회학이론은 종합되지 못하고 그 자체로 서로 구별되는 연구관심으로 존재했을 뿐이었다. 한국적 사회학 이론을 정립하려는 시도는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강박에 의해 간혀 있었다. 아래에서 다시 논의되겠지만 고전 사회학이 제도화의 단계를 거쳐 다시 한 번 도약하는 계기는 기존 이론이 해명하지 못하는 현실로부터의 충격이었다. 이러한 충격에 반응하면서 이론은 새롭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60~70년대 한국 사회학은 사회에 관심

10) 실증적 자료에 근거한 근대화이론 비판은 필립 맥마이클, 『거대한 역설-왜 개발할수록 불평등해지는가』, 교양인, 2013을 참고하라.

11) 정수복, 「김경동과 아카데미 사회학의 형성」, 『한국사회학』 50(4), 한국사회학회, 2016, 76-88쪽.

을 두는 것 자체를 아카데미즘의 훼손으로 간주했다.<sup>12)</sup> 콩트와 뒤르케의 실증주의가 그 근거로 제시되었고 때때로 베버의 가치중립성이 내세워졌다. 콩트와 뒤르케의 실증주의 자체가 정치적 개입이었으며 베버의 가치중립성은 처음부터 정치적 입장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은 인식되지 못했다.<sup>13)</sup> 1세대 사회학자들의 중립성이 냉전이라는 조건에 의해 주어진 것이었다면 2세대 사회학자들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정당화해야 했다. 즉 정치적 중립성을 과학과 객관의 이름으로 정당화해야 했던 것이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군사독재라는 현실로부터 거리를 두면서 그들만의 ‘아카데미즘’을 지켜낼 수 있었다.<sup>14)</sup>

박정희정권에 대한 도전과 세계적 수준의 새로운 사회운동의 출현은 주류사회학계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존하기 어려운 조건을 형성했다. 종속이론과 네오마르크스주의가 학생들을 중심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1980년 광주를 경과하고 이전 세대를 비판하는 새로운 지식장이 펼쳐지면서 금기시되었던 마르크스주의가 적극적으로 수용되기 시작했다. 사회학계에서도 김진균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이러한 열망에 호응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sup>15)</sup>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주류사회학계가 정치적 중립을 내세워 과학성을 실증주의로 협소하게 정의했다면 정치적 개입과 비판을 앞세운 새로운 세대의 사회학자들도 마르크스주의를 경직되게 해석했다. 1960년부터 본격화된 마르크스주의 위기와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시도된 다양한 마르크스주의 조류들에 대한 논쟁이 결여된 교조화 되고 속류화 된 마르크스주의를 받아들였던 것이다. 마르크스주의는 모순을 밝혀내고 그것으로부터 미래의 비전을 찾는 이론적 실천의 원료이기 보

12) 김경동, 「격변하는 시대에 한국사회학의 역사적 사명을 묻는다」, 『한국사회학』 40(4), 한국사회학회, 2006, 5-6쪽.

13) 정수복, 「이상백과 한국사회학의 성립」, 『한국사회학』 50(2), 한국사회학회, 2016, 17쪽. 실증주의에 대한 방법론적 논의는 Russel Keat and John Urry, *Social Theory As Science*, Routledge and Kegan Paul, 1982를 참고하라.

14) 김경동, 앞의 글.

15) 홍성태, 『김진균 평전: 민중을 위한 학문과 실천의 삶』(진인진, 2014)은 진보적 사회학의 거두인 김진균의 생애를 통해 이 시기 비판적 사회학의 궤적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다는 한국 사회를 거기에 맞추어야 하는 이론적 격자였던 것이다. 격렬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던 한국사회성격논쟁이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의 몰락과 함께 순식간에 소멸된 것은 이런 이유에서였다.

사회를 거기에 맞추어야만 했던 ‘경직된’ 마르크스주의를 대체하는 것은 마르크스주의를 완전히 해체하고 폐기하는 다양한 포스트모더니즘과 포스트구조주의였다. 마르크스주의는 포스트구조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의 비판을 통해 재구성되거나 전화되어야 하는 대상이었다. 마르크스주의를 용도폐기 하더라도 최소한 포스트모더니즘과 포스트구조주의와 대질하는 과도기적 단계를 거쳤어야 했다는 것이다. 주류사회학이 미국적 사회학을 그대로 수입한 것처럼,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경직된 교조를 신봉했던 것처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한 포스트주의자들의 이야기를 지식시장에 공급하기 시작했다.<sup>16)</sup>

포스트주의의 유행은 사회구조에 대한 이론적 비판을 가능하게 하는 거대서사의 포기를 시대적 당위인 것처럼 만들었다. 그런데 포스트주의의 유행은 신자유주의 출현과 소비주의의 강화를 동반했다. 시장의 논리는 일상을 상품관계로 변화시켰고 급기야 대학마저도 기업으로 변모시켰다. 지식은 상품이 되어 팔려야만 경쟁력이라는 이름으로 인정받는 것이 되어 버렸다. 지식의 상품화가 연구재단(학술진흥재단)에 의해 표준화되는 것은 포스트주의적 다양성 담론이 상품-화폐의 일원론으로 되돌아오는 역설을 만들었다.<sup>17)</sup>

다양한 포스트주의는 협소한 실증주의적 과학관과 속류화 된 마르크스주의를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었다. 하지만 그러한 기회는 ‘구조적’ 비판의 포기에 의해 단혀져 버렸다. 미시적인 연구로 분화되고 다양한 업적이 쌓이지만 현실과의 대화 통로는 닫히고 연구자들은 제한된

16) 이러한 전환을 대표하는 것은 이병천과 박형준의 포스트마르크스주의 수용이었다. 이병천, 「민주주의론의 새로운 발전을 위하여」, 이병천·박형준 편저, 『마르크스주의의 위기와 포스트마르크스주의 I』, 의암출판, 1992. 포스트마르크스주의 수용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논의는 서영표, 「라클라우가 ‘말한 것’과 ‘말할 수 없는 것’」, 『마르크스주의연구』 13(1), 경시대 사회과학연구원, 2016을 보라.

17) 이기홍, 「사회과학에서 생산성 그리고 구성과 실행의 분리」, 『경제와 사회』 77호, 비판사회학회, 2008.



대학 교수직을 얻기 위해 상품으로서의 지식을 생산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리게 된 것이다.<sup>18)</sup> 혹자는 학문, 특히 사회학의 위기는 현실과 완전히 단절하지 못하고 지식인들 사이의 경쟁과 보상의 체계가 갖추어지지 못한 한국의 조건에 의해 생겨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sup>19)</sup>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사회학이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는 낡은 시장-상품-화폐의 논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그런 입장과 태도 자체가 사회학의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론과 실천의 결합은 항상 모순적이고 갈등적이라는 것을 외면한 채 실천에 경도되는 것이 곧 과학성을 허무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지적 유희를 정당화 하고 있는 것이다.

## 2. 제주의 사회학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제주도는 한국의 변방이다. 4·3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것처럼 육지의 권력은 제주를 ‘식민지’로 생각했다. 조선시대부터 지속되어온 착취와 억압은 제주사람들에게 한국인 보다는 제주인이라는 정체감을 갖도록 했을 것이다. 이러한 종속적 성격은 제주가 한반도가 겪은 근대화를 뒤늦게, 그리고 늦었기 때문에 더욱 압축적으로 경험하게 했다. 분과학문으로서의 사회학이 육지보다는 뒤늦게 이식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을 것이다. 서울대학교에 사회학과가 설치된 1947년 보다 30년이 늦은 1978년 지역개발부 지역사회개발 전공으로 사회학의 씨앗이 뿌려졌다. 사회학과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것은 이보다 3년 뒤인 1981년이었다.

제주의 사회학의 내용을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제주사회 기본성격 설명’, ‘제주사회의 독특함 찾기’, ‘제주의 문화·역사·자연의 자원화’가 그것이다. 한국의 초창기 사회학이 그랬던 것처럼 제주 사회학의 출발은 근대화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제주사회에 대한 기

18) 윤상철, 「한국의 비판사회학 1998~2009」, 『경제와 사회』 85호, 2010, 125쪽과 정태석, 앞의 글, 98쪽.

19) 김정만, 「세계수준의 한국사회학을 향하여」, 『한국사회학』 35(2), 한국사회학회, 2001.

본 자료를 축적하는 조사 작업에 맞추어졌다.<sup>20)</sup> 인구나 가족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사회학적 조사 대상으로부터 출발하여 농촌사회였던 제주도 마을의 특성을 조사했다. 미약하지만 진행되고 있었던 도시개발의 기본구조를 추적하는 작업도 진행했다. 여기에 더해 제주사람들의 계급구조에 대한 통계적 조사와 투표행위를 통한 정치적 성향도 조사되었다.

초기 단계의 사회학이 기초 조사 작업만 수행한 것은 아니었다. 70년대 시작되어 80년대 본격화하기 시작한 개발정책이 제주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사회변동론적 설명과 노동자 의식에 대한 관심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개발의 과정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갈등을 사회운동론적 관점에서 연구하기도 했다. 급격한 개발과정에서 나타나는 도민의 의식변화, 도박과 청소년 비행 등 일탈 현상에 연구도 수행되었다.

‘기본성격에 대한 설명’과 ‘제주사회의 독특함 찾기’는 서로 겹쳐지는 연구영역이다. 하지만 후자는 제주인의 문화적 원류, 정체성과 의식, 제사와 가정의례 같은 정신구조에 대해 천착한다. 조사 작업을 통해 드러난 기본성격을 해명할 수 있는 제주사회의 문화와 정체성이 밝혀져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소위 반복되는 일상을 통해 재생산되는 습관의 세계를 파고드는 것이어야 했다. 섬이라는 지리적 조건과 한반도에 종속된 내부 식민지라는 정치적 조건이 만들어 낸 공동체 문화와 신화의 세계가 조명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제주의 독특성은 그 자체로 평가받지 못하고 대부분 근대성으로 표상된 이론적 표준, 육지의 ‘정상성’과 대조되는 예외적인 것으로 평가받을 뿐이었다. 제주의 사회학은 이러한 예외성을 넘어 강요된 근대성, 폭력적인 정상성을 비판할 수 있는 주체적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했다. 한국 사회학의 지적 식민지성에서 제주의 사회학도 예외일 수 없었다는 근본적인 한계도 작용했을 것이다. 결국 이식된 지식으로 제주의 사실들을 밝혀내고 그 결과들을 표준에 따라 합리화의 대상으로 설정하

20) 제주사회의 기본성격을 규명하고 제주의 독특함을 찾는 사회학적 성과는 신행철 외, 『제주사회론』, 한울아카데미, 1995와 신행철 외 지음, 『제주사회론 2』, 한울아카데미, 1998에 실린, 신행철, 이창기, 정대연, 김석준, 이상철, 조성윤, 김진영, 유철인 등의 연구를 통해 수행되었다. 논문 제목을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는다.

거나 그 반대편에서 비판적 재구성 작업 없이 전통을 아름다운 것으로 묘사하는 두 극 사이의 진자 운동을 벗어나지 못했다.

2000년대 들어서 제주사회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든다.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승격되고 관광지 개발과 도시개발이 본격화 되면서 급격한 사회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저가 항공이 도입되어 교통편이 편리해지고 중국 관광객에 대한 적극적인 유치와 추진된다. 투자이민 제도를 통한 중국자본의 진출도 활발해지고 대규모 개발 사업이 추진된다.<sup>21)</sup> 이러한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한 개발은 새로운 학문적 수요를 창출한다. 소위 제주의 문화와 역사를 관광콘텐츠로 만들어 내야 한다는 실용적 요구가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다. ‘제주의 문화·역사·자연’의 자원화가 학문적 영역으로 진입하게 된 것이다.

문화콘텐츠를 제공해야 하는 역할은 사회학보다는 인문학에 주목하게 했다. 제주의 역사, 신화, 문화적 유산을 이야기로 만들어내고 그것을 관광 자원화해야 한다는 산업적 목표와 인문학을 지원한다는 국가적 정책이 결합되어 나타난 현상이었다. 하지만 인문학이 학문적 성과를 쌓아가고 그것이 넘쳐흘러 지역발전을 위한 문화적 자원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역은 성립하기 어렵다. 통찰을 제공해야 할 최후의 보루인 인문학을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반성과 성찰의 근거를 잘라 내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사회학은 인문학이 중심이 된 문화콘텐츠 만들기에서 비껴나 있었다. 제주의 문화와 역사를 제주의 공공성과 공동체와 연결시키고 공동자원인 자연의 관리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토지, 물, 바람을 공동자원으로 정의하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사회학적 연구는 본격화 된 맹목적 개발주의에 대한 비판을 함축하고 있었다. 토지, 물, 바람의 사유화와 상품화는 곧 자연의 파괴와 자원의 고갈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적 태도를 바탕으로 깔고 있었다.<sup>22)</sup> 그리고 이러한 비판적 태도는 서구에서 제기된 공유자원

21) 조성찬, 「공유자원 사유화 모델에 기댄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전략의 비판적 검토」, 『공간과 사회』 26(2), 한국공간환경학회, 2016과 정영신, 「제주 개발의 역사와 오늘」, 최현 외 『공동자원의 섬 제주2』, 진인진, 2016을 참고하라.

22) 공동 독장에 관해서는 최현, 「공동자원 개념과 제주의 공동목적장」, 『경제와 사회』

이론을 제주도에 적용하고 발전시키는 작업을 포함하고 있었다. 정치학자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이 제기한 공동자원론을 제주도의 지하수 관리, 풍력발전, 공동목장에 적용함으로써 토착화하려고 시도한 것이다.<sup>23)</sup>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 우선 오스트롬의 공동자원론 자체가 미래지향적이기보다는 전통적인 공동체의 공동자원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결국 제주의 전통적 공동체의 자원관리 방식에 대한 확인을 넘기 어려운 약점을 가진다. 따라서 오스트롬의 이론을 출발점으로 삼되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다양한 사회이론을 끌어들여 보다 체계적인 이론을 구축하는 작업이 추구되어야 한다. 즉 현실을 비판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이론을 제주의 현실로부터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럴 때에만 문화적 자원과 역사적 특수성에 대한 용적 태도에 갇혀 있는 인문학적 상상력을 미래사회 비전을 만드는 작업에 투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에서 사회학하기의 목표는 ‘우리 안의 보편성’을 찾는 시도가 되어야 한다.<sup>24)</sup> 신자유주의라고 표현되었던 지배적 이데올로기가 퇴조하고 있는, 하지만 아직 새로운 패러다임은 출현하지 않은 위기의 시대에, ‘중심’의 기득권의 입장에서는 볼 수 없는 모순을 인식할 수 있는 경계의 위치는 제주에서 사회학하기가 갖고 있는 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sup>25)</sup> 이제 우리는 서구 중심성을 허물어트렸던 포스트주의적 비판의 무기를

98, 비판사회학회, 2013을, 지하수에 대해서는 최현, 「제주의 토지와 지하수」, 『환경사회학연구ECO』 17(2), 한국환경사회학회, 2013, 김선필, 「제주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와 공동자원 개념의 도입」, 『환경사회학연구ECO』 17(2), 한국환경사회학회, 2013을, 바람에 대해서는 최현·김선필, 「제주의 바람」, 『탐라문화』 46,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4와 김동주, 「제주도 바람의 사회적 변형과 그 함의」, 『환경사회학연구ECO』 16(1), 한국환경사회학회, 2012와 「자연의 수탈과 풍력발전」, 『환경사회학연구ECO』 19(1), 한국환경사회학회, 2015를 보라.

23) 정영신, 「엘리너 오스트롬의 공동자원론을 넘어서」와 최현·파이싱성, 「공동자원론의 쟁점과 한국 공동자원 연구의 과제」, 최현 외 『공동자원의 섬 제주1』, 진인진, 2016을 보라.

24) 조희연, 「우리 안의 보편성」, 김경일 외, 『우리 안의 보편성: 학문 주체화의 새로운 모색』, 한울아카데미, 2006.

25) *Harding The Science Question in Feminism* 1986, Cornell University Press, 1986.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포스트주의가 경도되었던 지적 상대주의가 초래한 위험 또한 알고 있다. 빈곤과 저발전의 고통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맹목적 근대화의 추구가 가지는 부정적 효과에 대해 성찰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미 일반화된 이러한 지적, 정치적 조건이 제주라는 지리적 위치, 인식론적 관점과 교차하는 지점이 제주의 사회학이 개입해야할 곳이다. 서구의 이론을 수용하지만 그것을 ‘우리의 조건’에 적용함으로써 ‘우리 안의 보편성’을 찾는 작업 말이다.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서 현실에 개입하는 비판적 사회학 하기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사회학은 처음 출발부터 그러한 개입이요 실천이었다. 이런 이유에서 사회학적 실천은 언제나 갈등, 대립, 투쟁 안에 있었다. 갈등, 대립, 투쟁이 없는 이론은 교조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아래의 3-4절은 제주에서 사회학하기의 미래를 내다보기 위해 갈등, 대립, 투쟁으로 점철된 사회학의 역사를 되돌아 볼 것이다.

### Ⅲ. 사회학의 출현과 성장

사회학은 매우 ‘어린’ 학문이다. 철학과 역사학은 동서양 모두 고대부터 존재했지만 사회학이 역사 속에 등장하는 것은 19세기 중반에 이르러서였다. 사회학이 자신의 이름을 얻게 되는 것은 오귀스트 콩트(Auguste Comte)와 허버트 스펜서(Herbert Spencer)에 의해서였다. 자본주의가 태동하고 있었고 과학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격변은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변화시켰다. 과학은 미신을 타파했고 기술의 발전은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것을 가능하게 했다.<sup>26)</sup> 마르크스의 표현대로 “새롭게 형성된 모든 것들은 정착되기도 전에 낡은 것이 되어” 버리는 세상이 도래한 것이다.<sup>27)</sup> 콩트는 그가 체험하고 목격한 급격히 변동하고 있는 사회의 모습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자 했다. 그 어떤

26) I. M. 짜이틀린, 『사회학이론의 발달사』, 한울아카데미, 1985, 7장을 보라. 알렉스 켈리니코스, 『사회이론의 역사』, 일신사, 2008도 참고하라.

27) 칼 맑스·프리드리히 엥겔스, ‘공산주의당 선언’, 『칼 맑스·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선집』 제1권, 박종철출판사, 1991, 403쪽.

편견과 선입견으로부터도 자유로운 경험적 관찰과 비교를 통해 사회의 구조를 설명하고(사회정학), 그 사회가 변화하는 동력과 양상을 이해하려고(사회동학) 시도했다.<sup>28)</sup>

콩트는 계몽주의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과학혁명에 감동받은 19세기인 이었다. 그가 꿈꾸었던 것은 물리학과 천문학, 화학과 생물학에서 성취된 보편적 방법을 사회에 적용하여 사회가 움직이는 법칙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그래서 스스로가 창시한 새로운 학문의 이름을 사회학에 대한 과학, 사회학이라고 불렀고 그 철학적 기초를 실증주의라고 이름 붙였다. 인간 정신의 신학적 단계와 형이상학적 단계를 거쳐 오직 관찰과 실험에만 토대를 두는 실증주의적 단계의 도래를 선언했던 것이다. 하지만 콩트나 스펜서의 ‘사회학’이 체계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웠다. 그들의 사상은 때로는 느슨했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으며 때때로 스스로가 부정한 과학 이전의 형이상학적 사고로 퇴행하기도 했다. 아직 근대세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기에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불완전한 사회학을 체계적으로 구축한 것은 칼 마르크스(Karl Marx)였다. 사실 마르크스는 ‘사회학을 거부한’ 사회학자였다. 마르크스가 생존했을 때의 사회학은 콩트와 스펜서로 대표되었고 마르크스는 그들의 사상을 수용할 수 없었고, 따라서 사회학을 부정했기 때문이었다. 어쨌든 마르크스는 콩트와 스펜서보다 더 날카롭게 근대의 풍경을 관찰했고 단지 그 겉모습을 묘사하는 것을 넘어 근본적 성격을 해명하고자 했다. 콩트와 스펜서가 천착했던 사회변동의 과학적 법칙을 체계화하려고 시도한 것이다. 마르크스가 목격했던 사회적 변동은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그의 말을 들어 보자.

“부르주아지는 자신들의 지배권을 얻은 곳에서는, 모든 봉건적, 가부장제적, 목가적 관계들을 파괴하였다. 부르주아지는 타고난 상전들에 사람을 묶어 놓고 있던 잡다한 색깔의 봉건적 끈들을 무자비하게 끊어 버렸으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노골적인 이해관계, ‘현금 계산’ 이외에 아무런 끈도 남겨 놓지 않았다. 부르주아지는 신앙적 광신, 기사적 열광, 속물적 감상 등의 성스러운 외경을 이기

28) 짜이틀린, 앞의 책 참고.

적 타산이라는 차디찬 얼음물 속에 집어 넣어 버렸다. 부르주아지는 인격적 가치를 교환가치로 용해시켜 버렸으며, 문서로 보장된 혹은 정당하게 얻어진 수많은 자유들을 단 하나의 파렴치한 상업 자유로 바꾸어 놓았다. 한마디로 그들은 종교적, 정치적 환상에 의하여 은폐되어 있던 착취를 공공연하고 파렴치하며 직접적이고 무미 건조한 착취로 바꾸어 놓았던 것이다.”<sup>29)</sup>

“부르주아지는 생산도구들, 따라서, 생산 관계들에, 그러므로 사회적 관계들 전체에 끊임없이 혁명을 일으키지 않고서는 존립할 수 없다. 이와는 반대로, 이전의 다른 모든 산업계급들에게는 낡은 생산 양식의 변함없는 유지가 그 제1의 존립 조건이었다. 생산의 끊임없는 변혁, 모든 사회상태들의 부단한 동요, 항구적 불안과 격동이 부르주아 시대를 이전의 모든 시대와 구별시켜 준다. 굳고 녹슨 모든 관계들은 오랫동안 신성시되어 온 관념들 및 견해들과 함께 해체되고, 새롭게 형성된 모든 것들은 정착되기 전에 낡은 것이 되어 버린다. 모든 신분적인 것, 모든 정체적인 것은 증발되어 버리고, 모든 신성한 것은 모독당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마침내 자신의 생활상의 지위와 연관들을 냉정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을 수 없게 된다.”<sup>30)</sup>

마르크스에게 이러한 급격한 변동의 결과는 신학적 원리 속에 숨겨져 있던 중세 봉건귀족-농노의 관계가 보다 노골적인 착취관계로 전환되는 것이었다. 새롭게 도래한 자본주의 사회의 지배자인 자본가의 제1목표는 이윤이었고 노동자는 이윤창출과정에서 사용되는 상품이었을 뿐이었다. 청년 마르크스는 이러한 사적소유와 착취 과정이 만들어내는 소외(alienation), 노동과정, 노동생산물, 동료인간과의 유대, 그리고 보편적 존재로서의 인간성으로부터의 소외를 이야기했다.<sup>31)</sup> 그리고 그러한 소외가 만들어지는 자본주의 사회구조에 천착해 들어가면서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가치법칙을 규명하려 했다.

한 세대 뒤에 태어난 독일인 막스 베버(Max Weber)는 마르크스가 목

29) 맑스·엔겔스, 앞의 책, 402-403쪽.

30) 같은 책, 403쪽.

31) 칼 맑스, 「1844년의 경제학 철학 초고」, 『칼 맑스·프리드리히 엔겔스 저작선집』 제1권, 박종철출판사, 1991, 71-83쪽.

격했고 스스로도 공유했던 급격한 사회변동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본다. 베버가 보기에 마르크스의 생각은 독단적이고 경제 결정론적이었다. 마르크스가 제시한 생산양식(mode production) 이론 같은 거대이론은 독단주의에 빠지기 쉽고 사회학이 마땅히 가져야 할 학문적 관심인 사회적 행위의 ‘의미’(meaning)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베버에게 중요한 것은 거대이론이 제시하는 법칙이 아니라 구체적 사회를 살았던 사람들의 감정상태, 그들이 스스로의 삶에 부여했던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이어야 했다. 당연히 연구주체의 선택은 신중해야 했고 우연성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초월적 법칙을 찾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다.<sup>32)</sup>

따라서 베버의 가장 큰 관심은 근대적 세계의 행위 유형을 규정짓는 합리적 사고가 어떻게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의미의 세계로부터 설명해 내는 것이었다. 이 문제는 그의 잘 알려진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가 정신’ 사이의 ‘선택적 친화력’(elective affinity) 개념을 통해 설명된다. 근대 서구에서 자본주의로 알려진 새로운 생산양식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었던 이유를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심성구조에서 찾아내려는 것이 그의 목표였다. 프로테스탄트 윤리, 그 중에서도 칼뱅주의가 가진 ‘예정조화설’(pre-destination)이 불러온 내적 고독과 불안이 금욕적 노동을 향한 강한 동기를 부여했고 이러한 문화적 가치가 자본주의의 초기적 조건과 결합하여 자본주의 부흥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다. 다시 한 번 베버에게 중요한 것은 의미다. 그것은 개인적인 의미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주어진 행위의 의미였다. 따라서 베버의 주된 관심은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생산양식이 아니라 필연적인 인과관계를 가지지는 않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사회적 의미(프로테스탄트 윤리)를 찾아내고 그것이 결과한 근대적 심성(자본가 정신)을 규명하는 것이었다.<sup>33)</sup>

베버가 도달한 근대인의 마음상태는 사실 마르크스의 그것과 크게 다

32) 막스 베버, 『막스 베버 사회과학방법론 선집』, 나남, 2011, 205쪽을 보라.

33) Max Weber,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Routledge Classic 2001, p.121. Ian Craib, *Classical Social Theory*,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pp.248-256, A. 기딘스, 『자본주의와 현대사회이론』, 한길사, 1981, 9장 참조.



르지 않았다. “이기적 타산이라는 차디찬 얼음물”에서 모든 가치는 얼어붙고 오직 목적을 성취하는 것만을 추구하는 ‘목적합리성’(purposely rational action)이 근대인을 움직이는 지배적인 행위유형이 되어 버린 것이다.<sup>34)</sup> 20세기 철학자들이 도구적 합리성(instrumental rationality)이라고 부른 그것 말이다.<sup>35)</sup> 베버에게 이러한 변화는 되돌려질 수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긍정적이었다. 미신과 편견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사회는 점차 합리화되었고 합리화는 서로 다른 사회의 영역들이 분화되는(differentiated) 과정이기도 했다. 하지만 베버는 불안했다. 목적만을 추구하는 합리성의 끝은 어디일까? 혹시 합리성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사회가 사람들을 질식시키지는 않을까? 목적 합리성이 그 자체로 거대한 체계가 되고 폭주하게 된다면? 합리화된 체계는 사람들을 가두는 거대한 쇠우리(iron cage)가 될 지도 모른다는 경고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sup>36)</sup>

베버가 할 수 있는 것은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뿐이었다. 마르크스처럼 구조적인 모순을 제시하고 그 모순이 계급투쟁으로 발전하여 새로운 사회혁명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독단적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공통분모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들 모두는 콩트로부터 시작된 과학과 근대가 가지는 진보적 의미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다. 다만 그 사회진보의 양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고 그래서 근대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진단하는 방식이 달랐을 뿐이다. 그래서 미래를 향해 어떤 식으로 개입해야 하는지의 처방도 다를 수밖에 없었다.

마르크스와 베버 모두는 콩트가 세워놓은 과학의 기준에 동의할 수 없었다. 감각적 경험과 실험에 근거한 실증주의적 과학을 수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마르크스에게 실증주의는 과학의 존재이유 자체를 허무는 것이었다. 과학의 존재이유는 감각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본질, 구조를 찾아들어가야 하는 것인데 실증주의가 티하고 있는 경험주의는 바로 그

34) 각주 44를 보라.

35) David Held, *Introduction to Critical Theory: Horkheimer to Habermas*, Hutchison, 1980, pp.148-174. Alan How, *Critical Theory*, Palgrave, 2003도 보라.

36) Max Weber, op. cit. p.123.

감각에만 기초해서 과학적 법칙을 추구하겠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베버에게 사회학의 관심은 의미의 세계였다. 그래서 추체험과 감정이입이 중요한 방법으로 동원되어야 했다. 인과적 설명을 포기하지는 않지만 그것은 이해(understanding)와 해석(interpretation)에 기초해야 하는 것이었다.<sup>37)</sup>

에밀 뒤르켐(Emile Durkheim)은 마르크스와 베버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제기한 실증주의에 대한 근본적 비판을 공유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실증주의적 방법과 공존하기 어려운 사회의 특징을 그것과 화해시키려는 위태로운 작업을 수행한다.<sup>38)</sup> 사회학자라는 이름으로 불린 적이 없는 마르크스와 베버와는 달리 뒤르켐은 사회학이 다른 분과학문과는 독립된 학과로 존재할 근거를 찾아야 했다. 사회학의 독자적인 연구대상을 제시해야 했던 것이다. 그는 이것을 사회적 사실(social facts)이라고 명명한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사실은 또 다른 사회적 사실을 통해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사실을 심리학적 요인, 생물학적 요인 등으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껏 개인적인 행동이라고 여겨지던 자살을 사회학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심리적 요인과 생물학적 요인이 아닌 사회적 통합과 규범에 의한 규제 정도라는 사회적 사실을 통해 설명하는 것이었다.<sup>39)</sup>

뒤르켐은 사회적 사실이 개인으로 환원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회적 사실은 개인의 바깥에 존재하며 개인의 행위를 강제하는 속성을 가진다. 사회란 개인을 사회적 존재로 길러내고 행위하게 하는 사회적 힘으로 존재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뒤르켐이 직면한 문제는 이렇게 개인에게 외재하며 개인의 행위를 구속하는 사회적 사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분석할 것인가에 있었다. 그가 생각한 사회구조는 존재론적으로 개인의 바깥에 존재하는 어떤 것이어야 했다. 어떻게 그러한 구조를 인식할 수 있을까? 뒤르켐은 콩트가 제시한 실증주의 안에서 이 과제를 수행하려 했다. 감각경험과 실험에 기초한 과학적 법칙의 정립 말이다. 하지만 베

37) Benton and Craib, *Philosophy of Social Science*, Palgrave, 2011, pp.79-81.

38) Benton,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Three Sociologies*, Routledge and Kegan Paul, 1977, pp.87-89.

39) Emile Durkheim, *The Rules of Sociological Method and Selected Texts on Sociology and its Method*, Macmillan, 1982, pp.119-145.

버가 지적한 것처럼 우리는 이미 언제나 가치 안에서 살고 있지 않은가? 가치를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대상을 중립적으로 관찰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지 않은가? 마르크스가 주장한 것처럼 사회가 깊은 구조를 가지는 다양한 기제들의 복잡한 총합이라면 감각경험은 기껏해야 현상을 관찰하는 것에 머물 수밖에 없지 않은가?<sup>40)</sup>

뒤르켐이 선택한 과학적 사회학의 길은 근대사회가 직면한 사회적 문제의 증상들의 목록을 작성하고 그것들을 묘사하는 역할은 훌륭하게 해 낼 수 있었다. 베버가 목적합리성의 구현체로 보았던 근대적 국민국가는 자본주의가 낳은 사회적 모순과 갈등을 관리해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경험적 자료가 필요했다. 그 역할을 사회학이 맡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지배적 담론이 인정하는 중립성과 객관성을 띤 과학을 표방해야 했다. 대학의 제도적 울타리 안에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것 이상으로 나갈 수 없었다. 마르크스는 제도화된 사회학의 변방으로 밀려 나 있었고 결과적으로 그의 날카로운 체계 비판은 사회학의 외곽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 IV. 사회학의 한계와 새로운 도전

##### 1. 분과학문으로서의 사회학

이제 사회학의 역할은 개혁적 사회정책을 수립하는 토대가 되는 사회조사에 집중되었다. 두 번의 세계 대전 사이 영국에서 등장한 새로운 자유주의(new liberalism)는 자유방임주의에 도전하면서 국가 개입에 의한 사회개혁을 추구했다. 대공황의 충격은 국가에 의한 경제개입(후에 케인스주의로 알려진)을 정당화했고 2차 세계 대전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한 복지국가는 기초 서비스를 탈-상품화시키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식조사와 사회조사를 필요로 했다. 사회학(과)의 존재 이유가 분명해 진 것이다. 급격한 도시화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갈등에 초점을 맞춘 대규모

40) Benton and Craib, op. cit. pp.34-37.

사회조사를 수행했던 시카고학파의 업적도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었다.<sup>41)</sup>

1945년 이후 세계에서 사회학은 또 다른 임무를 부여받는다. 미국의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체계를 모델로 한 사회이론을 만들어 내고 이에 근거해서 미국 중심의 세계체제를 설명하고 정당화 할 수 있어야 했다. 전자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 탈코트 파슨스(Talcott Parsons)였다. 그가 구축한 거대이론은 체계의 차원에서 안정적인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능적 요건을 명시하고 그 자체로 균형을 찾아가는 구조를 이론화했다. 소위 구조-기능주의(structural-functionalism)가 출현한 것이다. 사회적 문제는 일시적인 병리현상이며 기능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적응하도록 고안되었다.<sup>42)</sup> 이렇게 만들어진 이상적인 사회모델은 공산주의국가들과의 경쟁 과정에서 개발도상국에 적용되어야 했다. 미국 모델은 근대화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경로로 제시되었다. 소위 근대화이론이 만들어진 것이다.<sup>43)</sup> 사회학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지역학과 결합되어 개발도상국들의 상태를 분석하고 미국의 체계 모니 안으로 끌어들이는 국제 정책을 수립하는 이데올로기와 데이터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제 사회학은 ‘과학’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확실하게 구축하게 되었다. 사회학은 사회의 무한한 진보를 믿는 계몽주의 시대의 총아이며 자연과학에서 절정에 이른 경험주의(실증주의)를 받아들여 통합과학을 구현하는 주체가 되었다. 과학은 갈등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초월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발전되어야 한다는 믿음 또한 강력하게 자리매김하게 된다. 그리고 사회가 직면한 갈등은 근본적인 모순이 아닌 일시적인 ‘부적응’이나 ‘일탈’에 의해 생겨나는 것으로 ‘관리 가능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미신과 신화로부터 벗어난 계몽주의가 또 다른 신화였듯이 객관성과 중립성은 하나의 이데올로기였음이 드러났다. 마르크스, 베버, 뒤르켐의 사회학이

41) 마이크 세비지·알랜 와드, 『자본주의 도시와 근대성』, 한울, 1996의 2장은 도시사회학의 발전이라는 맥락에서 사회조사 작업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42) 알렉산더, 『현대사회이론의 흐름』, 민영사, 1993, 32-123쪽을 보라.

43) 맥마이클, 앞의 책 참고.

현실 운동과의 대화, 즉 기존의 사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사실들과의 대면을 통해 생겨났듯이 제도화된 분과학문으로서의 사회학은 자신의 이론적 틀로 품을 수 없는 새로운 사회적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이미 풍요와 번영의 시대로 상징되었던 50~60년대에조차 새로운 자본주의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게릴라 공격’을 받고 있었다. 냉전이라고 불린 ‘억압적 체계’가 자유로운 사상의 발전을 왜곡하고 있었지만 다양한 마르크스주의 분파들이 지배적인 이론체계에 도전하고 있었다. 이들이 보기에 풍요와 번영은 결코 자본주의의 모순을 치유할 수 없었으며 오히려 소비주의는 사람들의 감각을 무디게 하고 비판정신을 상실하게 해서 일차원적 인간, 소비하는 기계로 전락시키고 있었다. 프랑크푸르트의 사회조사연구소에 속한 일군의 이론가들이 이러한 비판적 운동에 앞장섰다. 제도화된 사회학 안으로 이데올로기 비판과 비판적 문화이론이 스며들기 시작한 것이다.<sup>44)</sup>

주류 사회학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출현한 사회적 안정기에서 동력을 얻었다면 이렇게 잠재되어 있던 비판적 사회학의 흐름이 전면에 등장할 수 있었던 힘은 구조기능주의와 근대화이론이 정당화했던 체계의 내적 모순의 폭발이었다. 풍요사회를 가능하게 했던 높은 노동 강도-높은 수준의 임금-소비의 순환은 이윤율의 저하에 의해 역전되기 시작했고 복지국가 시대의 ‘아이들’은 경제적 풍요를 넘어서는 정치적 힘과 자율성을 갈구하게 되었다. 사람들이 ‘탈물질주의적’ 가치라고 불렀던 것 말이다. 경제적 재분배를 넘어 다양한 정체성을 원하는 단계로 사람들의 의식이 고양되는 바로 그 순간 기초 서비스를 지탱했던 경제적 번영의 열기가 식어가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된 사람들은 저항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까지 자연스럽고 당연했던 모든 것이 부정된다. 새로운 사회운동(new social movements)의 시대가 도래 한 것이다.<sup>45)</sup>

44) Joseph, op. cit.

45) Alan Scott, *Ideology and the New Social Movements*, Unwin Hyman, 1990을 참고하라. 새로운 사회운동에 대한 이론적 검토는 서영표, 「사회운동이론 다시 생각하기」, 『민주주의와 인권』 13(2), 전남대 5·18연구소, 2013을 보라.

## 2. 실증주의의 한계 비판- 의식, 문화, 언어

사회운동의 급진화는 사회이론의 급진화와 겹쳐졌다. 20세기 중엽까지의 사회학은 좁게 정의된 실증주의적 과학에 집착했으며 서구적인 가치를 정상으로 간주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정상’으로부터의 이탈은 치유되어야 할 병리적 현상으로 간주되었다. 사회구성원들의 다양성과 자율성은 거시적 역사 조건에 의해 설명되어야 하는 종속변수였다. 하지만 실재는 언제나 이론을 뚫고 나온다. 안정적인 것처럼 보였던 서구의 전후질서는 그 자체로 자본주의적 모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으며 재분배(redistribution)에 만족할 수 없었던 복지국가 시절의 ‘아이들’의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더 많은 정치적 권리와 더 많은 다양성에 대한 인정(recognition)이었다.<sup>46)</sup>

정치적 권리와 정체성 인정을 향한 투쟁은 새로운 사회운동들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운동의 힘이 사회학으로 넘어 들어와 충격을 가하기 시작했다.<sup>47)</sup> 그 충격의 강도를 더욱 강하게 한 것이 이미 철학이라는 통로를 통해 사회학에 스며들어와 있던 마르크스주의의 부흥이었다. 이제 고전적인 사회학의 모든 전제가 이론의 범정에 소환된다. 그 범정은 낡은 체계의 부당함을 증언하는 증인들로 넘쳐 났다. 마르크스주의자들과 갈등이론가들, 그리고 구조와 기능보다는 개인의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행위를 옹호하는 이론가들이 구조기능주의와 실증주의의 ‘죄상’을 고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실증주의가 내세운 ‘과학’의 기준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미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실증주의를 근본에서부터 비판해 오고 있던 터였다. 그리고 1950년대 말 토마스 쿤(Thomas Kuhn)에 의해 제시된 ‘과학혁명론’은 보편적이고 누적적인 지식을 옹호하는 실증주의 과학관을 흔들어 놓았다. 과학적 실천조차 정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중립적이고 보편적인 과학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sup>48)</sup>

46) Nancy Fraser and Axel Honneth, *Redistribution or Recognition? - A Political-Philosophical Exchange*, Verso, 2003.

47) 서영표, 2009, 69-79쪽.

48) Benton and Craib, op cit, pp.58-63.

과학을 판별하는 기준은 객관성(objectivity)과 중립성(neutrality)이다. 그런데 새로운 사회운동과 이것으로부터 충격을 흡수한 이론운동은 객관성과 중립성의 기준을 의심했다. 중립성은 모든 갈등과 가치를 초월한 입장에서 사회를 분석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가능하기는 한 일인가? 마르크스주의자들과 페미니스트들은 공히 이러한 중립성이 신화이며 자본주의와 가부장제 사회의 기득권을 가진 집단이 기존질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입장만을 ‘객관적’이라고 규정한다는 점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결국 객관성은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정치적 입장일 뿐이며, 가치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라는 점이 부각되었다. 한 발 더 나가 중립성을 덕목으로 하는 객관성이 과학적 실천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도 제기되었다.<sup>49)</sup>

과학으로서의 사회학은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분석하고 해결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초월적인 중립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사회 안의 특정한 위치에 있을 때 파악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립성을 특징으로 하는 객관성은 매우 ‘약한 객관성’(weak objectivity)으로 과학을 위해 기여하는 바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동어반복과 사실 확인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동자의 관점, 여성의 관점, 소수자의 관점은 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을 보다 첨예하게 대면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인지하고 분석할 수 있는 지식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페미니스트 관점 인식론(feminist standpoint epistemologies)을 표방한 이론가들이 제기한 새로운 지식이론이 등장하게 된다. 그들의 원한 것은 특정한 위치와 관점에서 진술된 두터운 지식, ‘강한 객관성’(strong objectivity)이었다.<sup>50)</sup>

사회학은 합리성의 개념도 다시 정의한다. 베버가 통찰했듯이 근대적 합리성은 목적합리성의 폭주를 막지 못했다. 합리성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수단을 찾아내고 배치하는 것에 맞추어졌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효과는 수치로 계산된 최종결과가 가져오는 편

49) Sandra Harding, *Objativity & Diversity: Another Logic of Scientific Research*, Chicago University Press, 2015.

50) Benton and Craib, op cit, pp.146-158.

익보다 작을 때는 무시할 수 있는 것이었다. 기존 체계와 가치에 도전한 새로운 사회운동은 이렇게 협소한 합리성에 도전하게 된다. 위르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가 이론화 한 것처럼 인간의 합리성은 도구적 측면에 완전히 압도당할 수 없다는 점이 밝혀진다. 인간은 서로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실을 전달하려는 도덕적 의식으로서의 의사소통적 합리성(communicative rationality)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삶은 대화, 토론, 숙의를 통한 상호이해에 기반 해야만 하는 것이다.<sup>51)</sup> 하버마스는 이러한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초월적인 인간의 본성에서 찾아야 할지, 아니면 근대 민주주의 사회의 역사적 성취로 보아야 할 지에 대해 혼란에 빠졌다.<sup>52)</sup> 하지만 어쨌든 이성과 합리성은 일면적이지 않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었다.

하지만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적 합리성은 여전히 서구적 계몽주의의 지반 위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서구적 합리성만을 ‘합리적’이라고 규정짓는 문화적 편견에 대한 도전이 제기되어야 했다. 우리는 다양한 합리성의 기준을 가질 수 있다. 서구의 과학적 세계관에 의해 비과학, 과학이 아닌 것으로 낙인찍힌 전통적 지식은 수천 년 동안의 시행착오를 거쳐 얻어진 것으로 문화적 맥락 안에서는 합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는 것이다.<sup>53)</sup>

이러한 새로운 도전은 전후의 안정적 체계를 정당화하는 사회이론을 공격하는 선봉에 서있었던 마르크스주의조차도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다. 마르크스주의도 결국은 거대이론이었고 편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계급 환원론’과 ‘경제 결정론’의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 자체로 과학성을 주장하는 독단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기도 했다. 비판이론으로서의 마르크스주의도 새로운 사회운동과 그로부터 얻어진 근본적 비판정신의 도전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마르크스주의 내

51) Jürgen Habermas,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Volume Two The Critique of Functionalist Reason*, Polity Press, 1987, pp.121-152.

52) Rick Roderick, *Habermas and the Foundation of Critical Theory*, Polity, 1986, pp.162-163.

53) 이러한 도전은 20세기 중반 피터 윈치(Peter Winch)에 의해 체계적으로 제기되었다. Benton and Craib, pp.94-101을 보라.



부의 변종들이 생겨나고 치열한 이론적 투쟁이 전개된다.

하지만 ‘운동’으로서의 사회학이론은 여기에 멈추지 않는다. 모든 지식의 권위와 근거를 부정하는 급진적인 회의가 등장하게 된다. 다양한 포스트주의가 출현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포스트구조주의, 포스트모더니즘, 그리고 포스트마르크스주의는 마르크스주의마저도 자유롭지 못했던 권위주의, 남성중심주의, 서구중심주의를 무너뜨리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론적인 수준에서 현실을 짓누르고 있는 억압적 구조를 비판하는 데까지는 효과적이었지만 비판 이후 여전히 실재하는 억압적이고 착취적인 자본주의를 변화시키는 투쟁의 좌표를 설정하는 데에서는 약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포스트주의 비판의 과잉은 협소한 과학과 객관성, 합리성을 비판하면서 역사적으로 성취되어야 하고 합의되어야 하는 객관성과 합리성을 송두리째 기각해 버리게 된 것이다.<sup>54)</sup>

### 3. 사회학의 도전-포스트모더니즘을 넘어

지난 30년 동안 사회학은 일상을 상품화시키고 공적 영역을 자본의 놀이터로 만들며 금융자본의 논리에 의해 사회전체가 재조직화 되는 거대한 자본주의 변형에 대해 근본적인 비판을 제기하지 못했다. 이러한 비판을 가능하게 할 체계적인 이론은 이미 거대서사로 부정되었고 국지적인 문화 현상에 대해 서로 고립되어, 전문가의 영역으로 축소된 부분에 대한 담론만을 생산했다. 그리고 점점 상업화되어 기업처럼 운영되는 대학의 변화조차 저지하지 못했다. 사회학은 비판 정신을 상실하고 사회현상의 다양한 양상에 대한 인상주의적 분석을 제공하거나 상업화된 대학의 일자리를 얻기 위한 지식상품으로 쪼그라들었다. 그 어느 때보다 사회학의 비판적 목소리가 필요한 시대, 사회학은 스스로의 역할과 임무를 방기한 채 제도화된 대학의 안락한 자리에 자족하게 된 것이다

사회학은 현실과의 끊임없는 대결과 대화, 실천과 투쟁의 산물이라고 했다. 그래서 제도 안의 안락한 지위는 곧 사회학의 존재의미를 침식할

54) Andrew Sayer, *Realism and Social Science*, Sage, 2000을 보라.

수밖에 없다. 현실을 통찰하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체험하고 있는 고통과 불만의 원인을 찾고 대안을 제시하지도 못하는 사회학은 존재할 의미가 없는 것이다. 안락함은 곧 사회학이라는 분과학문의 위기가 되어 돌아온다. 하지만 ‘사회학의 위기’는 제도화된 학문으로서의 사회학의 위기이지 사회학의 비판적 역할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위기는 사회학이 한 단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계기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질문이 제기된다. 무엇을 할 것인가?

사회학은 고전 사회학이 가졌던 사회학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사회적 사실에 대한 경험적 조사라는 협소한 과학관에서 벗어나 인간의 생존을 규정짓는 자연과 인간 사회의 교호관계와 공진화를 새로운 이론적 대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sup>55)</sup> 그리고 낡은 패러다임이 고수했던 분석대상으로서의 국민국가의 협소한 틀을 넘어 지구적 차원의 협력과 사회운동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 한다.<sup>56)</sup>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패러다임이 고수했던 독단주의를 넘어가야 한다. 포스트주의가 안내한 다양한 견해들 사이의 차이를 옹고 그름, 정상과 비정상으로 판결하지 않고 민주적인 토론을 통한 생각의 조정과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인식론적 상대주의(epistemological relativism)와 속의 민주주의(deliberate democracy)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세계에 대한 실재론적 합의가 필요하다. 단 담론을 통해서만 그 실재에 접근할 수 있는 인간은 실재와 담론사이의 간극을 인정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러한 인정이 지적 허무주의로 경도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실재를 이해하는 공동 작업에 동참하고 있다는 지식구성 과정의 민주화가 동반되어야 한다.<sup>57)</sup>

이제 사회학은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고 체험하는 암묵적이고(tacit) 실천적(practical) 지식이 표현되고 공적인 정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통로들을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한다. 평범한 사람들은 주택, 교통, 교육, 의료, 에너지, 상하수도 등 사회를 유지하는 모든 분야에

55) Peter Dickens, *Society and Nature : Changing Our Environment, Changing Ourselves*, Polity Press, 2004를 보라.

56) 이매뉴엘 월러스틴, 『월러스틴의 세계체제 분석』, 당대, 2004를 참고하라.

57) 이러한 주장은 서영표, 「라클라우가 ‘말한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에서 제시되었다.

서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그들은 체험으로부터 얻어진 암묵적 지식을 체계화된 형식으로 표현할 수 없다. 이러한 암묵적 지식은 프리드리히 하이에크(Friedrich Hayek)가 주장한 것처럼 시장의 가격기제를 통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시장 기제는 민주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학적 개입은 바로 여기서 암묵적 지식이 체계적인 형태로 드러나게 하는 것,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이 정치적 주체가 될 수 있는 자원, 정보, 지식의 급진적 재분배를 기획하는 것이다.<sup>58)</sup> 평범한 시민들이 가진 암묵적 지식을 토대로 하지 않은 사회학적 지식은 공허한 것이다. 반면 사회학적 개입이 없는 암묵적 지식은 어디로 가야할지 길을 찾기 어렵다. 맹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 V. 제주에서 사회학 하기-우리 안의 보편성 찾기

해체는 과잉된 반응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비판적 사회학은 강력한 대상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스스로도 해체시켜야 했다. 우리는 이렇게 해체되어 흩어져 버렸지만 현실의 모순과 갈등 속에 남아 있는 비판적 사회학의 흔적들을 찾아 새롭게 재구성해야 하는 책무를 짊어지고 있다. 그리고 제주라는 지리적, 역사적, 사회적 조건은 이러한 재구성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 전근대, 근대, 탈근대의 ‘부정적 혼종성’<sup>59)</sup>이 구체적으로 체험되고 있는, 그러면서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이론적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제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선 제주에서 사회학하기가 누릴 수 있는 인식론적 조건을 검토해야 한다. 현재의 제주의 시공간적 특성이 가져다주는 인식론적 위치에 의해 기존의 패러다임을 극복하는 실천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제주는 여전히 ‘경계’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제주의 시공간적 특성은 중심이

58) 서영표, 2009, 255-259쪽.

59) 이 용어는 아래에서 설명될 것이다.

보지 못하는 우리사회의 모순을 볼 수 있는 인식론적 위치를 갖는다. 물론 제주라는 위치가 자동적으로 덜 허위적이고 보다 진실에 가까운 지식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문제는 실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학의 강점은 주변의 관점(이방인의 관점)에서 ‘익숙한 것’을 ‘낯 설은 것’으로, ‘개인적인 것’을 ‘구조적인 것’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실천적 개입이다. 아카데미한 사회학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실천은 과학성을 해치지 않는다. 사회학이 찾아야 하는 과학성, 그리고 우리가 모두 간혀 있는 근대적인 과학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이론적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실천이 지적 허무주의로 치우치는 것을 경계하면서도 그것을 과학성 안에 포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서의 사회학적 실천이며, 우리에게서 제주에서의 사회학하기일 것이다. ‘근대적’ 합리성을 전복하면서, 포스트모던적 상대주의로 정도되지 않는, 그러면서도 전근대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요소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사회학하기가 요청되는 것이다.

제주에는 ‘전근대성’과 ‘근대성’, 그리고 ‘탈근대성’이 착종되어 있다.<sup>60)</sup> 한국 사회에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고, 제주에서는 이보다 더 일상화되어 있는 권위주의와 연줄에 기대는 연고주의(전근대성)가 모든 것을 양적으로 환원하고 그것을 확장하는 것을 유일한 선으로 생각하는 성장주의(근대성)와 결합된다. 그리고 권위주의-연고주의+맹목적 성장주의는 끊임없는 욕망과 그것을 채우는 소비를 미덕으로 삼는 소비주의(탈근대성)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는다. 바다에 의한 지리적 격리 따위는 쉽게 넘어설 수 있는 근대의 기술주의는 제주도 내부에서 자본의 논리를 충실하게 내면화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분리해 내고 자본과 상품의 흐름에 의해 이익을 얻는 집단과 착취 받는 집단을 갈라 친다. 이제 권위주의-연고주의+맹목적 성장주의+소비주의는 압축적이고 맹목적인 개발주의의 모습을 띠게 된다. 개발의 결정과 추진은 권위주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이것을 정당화는 것은 연줄망(권당)에 기댄

60) 앞에서는 포스트모던이라는 영어 표현을 그대로 사용했지만 아래에서는 제주가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시간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전근대, 근대, 탈근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비민주적 통로를 통해 이루어진다. 소수의 정치엘리트와 토지소유자, 개발업자들이 이익을 선취한다. 일상적인 문화 속에서 지배적인 권력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보존되어 왔던 독특함은 침식된다. 척박한 섬이라는 조건과 가혹한 기후 조건 속에서 자연과의 신진대사를 유지하면서 만들어 왔던 공존과 공진화의 방식은 철저하게 파괴된다. 역사적 지평 속에서 가꿔왔던 생존의 방식, 즉 연대와 협동은 삶의 방식도 무참히 깨진다. 화폐적 가치의 확장만을 바라보는 맹목성이 지배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개발의 이익은 소수가 거두어 간다. 하지만 맹목적 개발을 지속시키는 힘은 계속 팽창하는 소비행위다. 결국 많은 사람들은 빛에 올라 앉아 소비주의 문화의 달콤함에 중독된다.

하지만 ‘전근대성’은 목적합리성만을 기준으로 추진되는 근대화의 암울한 결과를 치유할 덕성도 간직하고 있다. 공동체를 지탱하는 협동과 연대의 정신이 그것이다. 전근대의 권위주의로부터 풀려 나온 협동과 연대의 정신은 폭주하는 근대화 과정에서 잃어가고 있는 ‘우리’의 감정을 되살려 내는 토대가 될 수 있다. 근대성도 목적합리성만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공론장에서의 토론과 합의를 추구하는 민주주의도 근대의 산물인 것이다. 연대와 협동의 정신이 낡은 공동체의 권위주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민주주의와 해우했을 때 가능해진다. 그리고 ‘탈근대성’은 욕망을 먹고 자라는 소비주의뿐만 아니라 목적합리성과 권위주의를 공격할 수 있는 다양성과 차이의 원리를 만들어 낸다. 이제 협동과 연대는 민주주의라는 절차적 합리성과 함께 구체적 삶의 체험에 기초한 다양한 주체들의 실천이 있을 때에만 권위주의와 성장주의를 넘어 새로운 삶의 양식을 실험할 수 있는 것이다.

협동과 연대+민주주의+다양성과 차이의 접합은 지금 제주를 병들게 하고 있는 권위주의-연고주의+맹목적 성장주의+소비주의의 부정적 혼종성(negative hybridity)을 넘어설 수 있는 긍정적 혼종성(positive hybridity)이다. 문제는 이러한 긍정적 혼종성이 쉽게 성취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제주사회의 발전방향을 근본에서부터 바꾸는 것이기에 정치적 구조와 경제적 구조를 송두리째 전환해야만 성취 가능한 목표인 것이다. 하지만 이런 구조적 전환은 우리들의 몸매 새겨진 일상의 습관이 일으키는 마찰과 그 마찰로부터 생겨나는 미세한 떨림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

고 마찰과 떨림은 제주사람들의 마음 한 구석에 자리 잡은 집단적 기억, 연대와 협동의 기억을 불러낸다.

제주사람들의 집단적 기억은 한라산과 오름, 바다라는 공간을 매개로 만들어진 것이다. 매일매일 바다에 접하고 산다. 한라산을 바라보고 산다. 그리고 오름 사이사이에서 살아간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들어진 ‘살아 내기’의 방식으로서의 협동과 연대는 자연환경과의 공존을 통해 키워지고 지탱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개발의 광풍은 자연환경을 급속도로 변화시킨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도 이기적인 심성으로 변화시킨다. 하지만 제주인의 삶은 여전히 바다 없이는 상상할 수 없고 한라산과 오름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 구체적인 삶의 현장으로서 생태적 환경을 파헤치고 절단하는 자본의 논리, 상품의 논리, 화폐의 논리가 부과하는 공간 감각과 시간 감각은 제주 사람들의 몸의 리듬, 템포와 심한 마찰을 일으키게 된다. 그리고 집단적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공존의 흔적과 엇나가게 된다. 마찰과 엇나감은 진동과 탈구를 발생시킨다. 진동과 탈구는 ‘지금-여기’를 불편해 하면서 ‘지금-여기’에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다를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게 한다. 자본의 논리가 가지는 압력에 의해 찌그러들었지만 틈새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틈새를 파고들어 미세한 떨림을 분명하게 모아 내는 것이 제주 사회학의 임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원자로 파편화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주는 것이기도 하다. 사회학은 지금의 체계에 의해 부정되고 있는 ‘우리’를 다시 구성해 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과거 전통사회가 ‘강요했던’, 개인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은 채 권위주의적으로 주어졌던 ‘우리’가 아니라 근대적 민주주의에 의해 보호받고 탈근대적인 정체성에 의해 고양된 ‘우리’여야 한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는 강정에서, 제2공항이 지어질 예정인 성산에서, 오라 관광단지 예정지에서, 도의회 앞에서, 그리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얘기 거리를 찾아야한다. ‘지금-여기’, 떨림, 아우성과 몸짓이 있는 바로 여기서 말이다.<sup>61)</sup>

61) 서영표, 「몸과 기억의 반란」, 『창작과 비평』 173호, 2016을 보라.

‘지금-여기’의 떨림, 아우성과 몸짓의 애깃거리가 단순히 흥밋거리를 찾아 묘사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을 가능하게 할 이론적 논의가 촉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제주의 사회학하기는 근본적인 차원의 두 가지 종합이 중개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는 이론의 ‘수직적 종합’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사회학이론이 협소하게 정의된 ‘합리성’, 즉 도구적 합리성에 갇혀 있었다면 미래의 사회학은 무의식-감정-실천적 이성-합리성 중 어느 하나에 천착하기보다 인간 행위를 다차원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열린 이론을 추구해야 한다. 사회학이론은 한편으로는 구조와 행위의 이분법에 의해 갈라져 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관된 이론적 입장으로 구조와 행위를 통합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려 왔다. 이제 이론적 일관성에서는 다소 느슨하지만 대상에 대한 설명력을 높이기 위한 이론들의 종합을 추구해야 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이 제창한 인식론적 상대주의를 과학과 합리성에 대한 포기까지 밀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인식론적 상대주의는 서로 다른 이야기들, 설명들이 엄격한 논리, 일관성, 경험적 근거에 의해 토론되는 절차를 통해 과학성과 합리성을 방어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수평적 종합’이다. 협소한 과학주의적 태도와 경제학적 논리의 지배는 사회학을 황폐화 시켰다. 사회학을 비롯한 사회과학 전반이 경제학의 식민지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관계를 역전시켜야 할 때가 되었다. 수직적 종합의 길을 따라 현실에 뿌리 내린 사회학은 실제적인 근거를 결여한 경제학적 가정, 즉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고립된 원자로서의 인간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제기해야 한다. 그러한 비판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철학적 정의 자체를 문제 삼는 것까지 나갈 수 있다. 또한 오랫동안 학계를 지배했던 경험주의적인 과학관에 대해서 문제 제기 하고 인간과 자연의 복합적 관계를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 인간과 자연이 함께 진화해 온 굴곡지고 의도하지 않았던 우발성(contingency)으로 가득 찬 역사적 궤적을, 잠정적이지만 체계적으로 설명하려는 역사학적 연구가 동반되어야 한다. 수직적 통합과 수평적 통합은 ‘제주학’이라고 이름 붙여진 학문적 전통에 피와 살을 만드는 과정일 것이다. 제주의 고유성을 찾아 복원하려는 방어적이고 과거지향적인 ‘제주학’이 아니라 제주의 특수성에서 보편성을 찾아내는 미래지

향적인 제주학을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정립된 학문적 토대로서의 ‘제주학’은 실용적, 정책적 연구에도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100만을 넘지 않는 인구규모이지만 그 안에 문화적 다양성을 담고 있는 제주, 그리고 특별자치도라는 정책적 개입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제주는 순수학문을 넘어 응용학문이 실험되고 검증될 수 있는 무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발주의와 소비주의, 그리고 권위주로부터 자유로워진 사회학적 상상력은 자본, 권력, 전문가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는 도시계획, 주택, 에너지, 교통, 교육, 의료와 같은 일상의 영역을 평범한 시민들의 민주적 참여가 관철되도록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제주의 사회학은 어느덧 마흔 살을 앞두고 있다. 이 글에서 충분히 검토되지는 못했지만 그동안 쌓인 연구 성과가 결코 작지 않다. 하지만 그 동안의 연구 성과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학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것은 아니다. 본문에서 제시되고 있는 사회학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서는 제주의 사회학자들, 그리고 분과 학문을 뛰어 넘어 제주사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실천가들과 학자들의 공동 작업이 절실히 요청된다. 이 글이 그러한 공동 작업에 대한 호소라고 할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1. 저서

- 기딩스, A. 『자본주의와 현대사회이론』, 한길사, 1981
- 맑스, 칼, 프리드리히 엥겔스, 『칼 맑스·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선집』 제1권, 박종철출판사, 1991.
- 모리스, 로절린드 C. 엠크,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서발턴 개념의 역사에 관한 성찰들』, 그린비, 2013..
- 맥마이클, 필립, 『거대한 역설-왜 개발할수록 불평등해지는가』, 교양인, 2013.
- 모한티, 찬드라 탈파드, 『경계 없는 페미니즘: 이론의 탈식민화와 연대를 위한 실천』, 도서출판여이연, 2005.
- 바우만, 지그문트, 『사회학의 쓸모』, 서해문집, 2015.
- 베버, 막스, 『막스 베버 사회과학방법론 선집』, 나남, 2011.
- 서영표, 『런던코뮌』, 이매진, 2009.
- 세비지, 마이크, 알랜 워드, 『자본주의 도시와 근대성』, 한울, 1996.
- 신행철 외, 『제주사회론』, 한울아카데미, 1995.
- \_\_\_\_\_, 『제주사회론2』, 한울아카데미, 1998.
- 짜이틀린, I. M., 『사회학이론의 발달사』, 한울아카데미, 1985.
- 알렉산더, 제프리, 『현대 사회이론의 흐름: 사회학도를 위한 스무 개의 강의록』, 민영사, 1993.
- 월러스틴, 이매뉴엘 『월러스틴의 세계체제 분석』, 당대, 2004
- 캘리니코스, 알렉스, 『사회이론의 역사』, 일신사, 2008.
- 크레이브, I., 『현대사회이론의 조명-파슨즈에서 하버마스까지』, 문맥사, 1991.
- 홍성태, 『김진균 평전: 민중을 위한 학문과 실천의 삶』, 진인진, 2014.

### 2. 연구논문

- 김경동, 「격변하는 시대에 한국사회학의 역사적 사명을 묻는다」, 『한국사회학』 40(4), 한국사회학회, 2006
- 김경만, 「세계주권의 한국사회학을 향하여: 과학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몇 가지 제언」, 『한국사회학』 35(2), 한국사회학회, 2001

- 김동주, 「제주도 바람의 사회적 변형과 그 함의」, 『환경사회학연구ECO』 16(1), 한국환경사회학회, 2012.
- \_\_\_\_\_, 「자연의 수탈과 풍력발전」, 『환경사회학연구ECO』 19(1), 한국환경사회학회, 2015
- 김선필, 「제주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와 공동자원 개념의 도입」, 『환경사회학연구ECO』 17(2), 한국환경사회학회, 2013.
- 서영표, 「사회운동이론 다시 생각하기」, 『민주주의와 인권』 13(2), 전남대 5·18 연구소, 2013.
- \_\_\_\_\_, 「당연한 것을 낫설게 하는 실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 『진보평론』 60, 2014.
- \_\_\_\_\_, 「저항적 연대와 사회변혁- ‘적대 없는’ 연대에서 ‘적대를 통한’ 연대로」, 『로컬리티인문학』 14,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원, 2015.
- \_\_\_\_\_, 「라클라우가 ‘말한 것’과 ‘말할 수 없는 것」, 『마르크스주의연구』 13(1),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 2016.
- \_\_\_\_\_, 「몸과 기억의 반란」, 『창작과 비평』 173호, 2016.
- \_\_\_\_\_, 「비판정신의 실종과 민주화운동 세대의 이율배반」, 『대학: 담론과 쟁점』, 한국대학학회, 2016.
- 윤상철, 「미국 사회학의 지적·인적 지배와 ‘한국적 사회학의 지체」, 학술단체협의회 엮음, 『우리 학문 속의 미국: 미국적 학문 패러다임 이식에 대한 비판적 성찰』, 한울아카데미, 2003.
- \_\_\_\_\_, 「한국의 비판사회학 1998~2009」, 『경제와 사회』 85호, 비판사회학회, 2010.
- 이기홍, 「사회과학에서 생산성 그리고 구성과 실행의 분리」, 『경제와 사회』 77호, 비판사회학회, 2008.
- 이병천, 「민주주의론의 새로운 발전을 위하여」, 이병천·박형준 편저, 『마르크스주의의 위기와 포스트마르크스주의 I』, 의암출판, 1992.
- 정수복, 「이상백과 한국사회학의 성립」, 『한국사회학』 50(2), 한국사회학회, 2016.
- \_\_\_\_\_, 「김경동과 아카데미 사회학의 형성」, 『한국사회학』 50(4), 한국사회학회, 2016.
- 정영신, 「엘리너 오스트롬의 공동자원론을 넘어서」, 최현 외, 『공동자원의 섬 제주2』, 진인진, 2016.
- \_\_\_\_\_, 「제주 개발의 역사와 오늘」, 최현 외, 『공동자원의 섬 제주2』, 진인진, 2016.
- 정대석, 「사회학의 위기 논쟁과 비판사회학의 대응」, 『경제와 사회』 88, 비판사

회학회, 2010.

조성찬, 「공유자원 사유화 모델에 기댄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전략의 비판적 검토」, 『공간과 사회』 26(2), 한국공간환경학회, 2016.

조희연, 「우리 안의 보편성: 지적·학문적 주체화로 가는 창」, 김경일 외, 『우리 안의 보편성: 학문 주체화의 새로운 모색』, 한울아카데미, 2006.

최현, 「공동자원 개념과 제주의 공동목장」, 『경제와 사회』 98, 비판사회학회, 2013.

\_\_\_\_\_, 「제주의 토지와 지하수」, 『환경사회학연구ECO』 17(2), 한국환경사회학회, 2013.

최현·김선필, 최현·김선필, 「제주의 바람」, 『탐라문화』 46,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4.

최현·파이싱성, 「공동자원론의 쟁점과 한국 공동자원 연구의 과제」, 최현 외, 『공동자원의 섬 제주1-땅, 물, 바람』, 진인진, 2016.

### 3. 외국서

Bailey, Michael and Des Freedman eds., *The Assault on Universities: A Manifesto for Resistance*, Pluto Press, 2011.

Benton, Ted,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Three Sociologies*, Routledge and Kegan Paul, 1977.

Benton, Ted and Ian Craib, *Philosophy of Social Science*, Palgrave, 2011.

Craib, Ian, *Classical Social Theory*,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Dickens, Peter, *Society and Nature : Changing Our Environment, Changing Ourselves*, Polity Press, 2004.

Durkheim, Emile, *The Rules of Sociological Method and Selected Texts on Sociology and its Method*, Macmillan, 1982.

Fraser, Nancy and Axel Honneth, *Redistribution or Recognition? - A Political-Philosophical Exchange*, Verso, 2003.

Habermas, Jürgen,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Volume Two The Critique of Functionalist Reason*, Polity Press, 1987.

Harding, Sandra, *The Science Question in Feminism*, Cornell University Press, 1986.

Harding, Sandra, *Objectivity & Diversity: Another Logic of Scientific Research*, Chicago University Press, 2015.

Held, Hans, *Introduction to Critical Theory: Horkheimer to Habermas*, Hutchison, 1980.

How, Alan, *Critical Theory*, Palgrave, 2003.

Joseph, Jonanthan, *Marxism and Social Theory*, Palgrave, 2006.

Keat, Russell and John Urry, *Social Theory As Science*, Routledge and Kegan Paul, 1982.

Roderick, Rick, *Habermas and the Foundation of Critical Theory*, Polity, 1986.

Sayer, Andrew, *Realism and Social Science*, Sage, 2000.

Scott, Alan, *Ideology and the New Social Movements*, Unwin Hyman, 1990.

Weber, Max,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Routledge Classic 2001.

## Abstract

Doing Sociology in Jeju-Reclaiming Raison d'être  
of Sociology

Seo, Young-Pyo\*

This paper discusses how to overcome the crisis of sociology. The crisis of sociology, which was recently surfaced, is an over-determined expression of the fundamental defects of Korean sociology as a passively transplanted discipline together with the economic, political, and social crises at the global level. However, the fact that this multiple crises are experienced as a crisis of sociology is paradoxical. From the outset, sociology was the result of rapid social change, and have developed through diagnosing the crises, prescribing them, and intervening into the real world with the theoretical ideas stemming from diagnosis and prescription. In this context, the claim that the crisis must be overcome by distancing sociology from the reality, which could be believed to keep pure academism, misunderstand cause of the crisis. In order to demonstrate that this position is wrong, this paper tries to show that the history of sociological thinking has been the outcomes of incessant dialogues and tensions between theory and reality. Then, we can have an opportunity in which we criticise the narrowly defined idea of positivist science and reflect on the modern purposive rationality. The critique and reflection provided by the history of sociological thinking

---

\* Prof. of Jeju National University.

encourage us to think that a marginal position rather than a central one could give an advantage in overcoming the crisis. In conclusion, this paper argues that, when Jeju as a concrete place encounters the theoretical resources given by the sociological critique and reflection, new (theoretical) practice can emerge. The universal ground of the *raison d'être* of sociology can be reclaimed through exploring Jeju's particularity.

Key Words : Jeju, sociology, crisis of sociology, critique, theoretical practice.

교신 : 서영표 632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E-mail : seoy@jejunu.ac.kr)

논문투고일 2016. 12. 29.

심사완료일 2017. 02. 06.

게재확정일 2017. 02. 07.